

21세기 환경정책 추진방향

김명자 (환경부장관)

새천년이 밝았다. 반복되는 날이고 해(年)이지만, 달력에 표기된 2000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지난 천년대를 마감하고 꿈과 희망의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새천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은 새천년은 곧 풍요의 시대라고 예견하고 가슴 설레인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몇 십만 년으로 보고 있지만 새천년 맞이의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더구나 역사가 기록된 지난 수 천년 동안에 새 천년 맞이 단 몇번에 불과하였기에 기대와 희망에 들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꿈과 희망의 성취여부는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오늘날 지구촌은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도전으로 인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에 들어 가속화된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 이로 인한 산업문명의 만개(滿開)와 확산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혁신역량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지식기반사회가 현실화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하나된 세계, 지구촌(地球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풍요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의 암운(暗雲)이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과거 일부 지역이 국한되어 발생하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로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분수(分數)를 넘는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의 한계를 넘어 자원을 남용하고,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쓰고 버리는 생활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위기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프레온가스(CFCs)라는 인간의 발명품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종의 14%, 조류와 포유류의 11%, 어류의 1/3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면서 복잡하고 미묘한 생태계의 균형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생물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異狀)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의 환경문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간 고도 압축성장을 실현하면서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 내에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한편, 좁은 가용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환경오염 부하가 미국의 5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4대강의 수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

고 있지 않으며, 청정연료와 저유황유의 보급을 확대 했지만 자동차 보유대수가 이미 1,100만 대를 넘어 서면서 오존오염과 같은 선진국형 도시 대기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리에 꼭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 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적기(適期) 건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다가오는 새천년에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접근 방법과 대책의 틀, 이를 실현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면(紙面) 관계상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 천년의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개별 환경대책의 근원이 되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을 확산시켜야 한다.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의 이분법적(二分法的)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환경보전이 되도록 하는 "통합적 사고와 행태"를 국가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산업 에너지, 토지, 농업, 관광 등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반의 고정 관념을 깨고, 경제와 환경은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

둘째,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종전까지의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공급중심, 팽창위주가 아니라,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환경정책을 펴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고, 택지가 부족하면 산을 헐고 바다를 매립해서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또한 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감안해야 한다. 성장의 신화(神話), 공급 만

능의 사고를 버리고, 있는 것을 최대한 아껴 쓰고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환경을 보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2000년부터는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규 주택은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공공근로사업과 국고를 지원하여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할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수도요금의 현실화, 누진율을 강화하여 절수참여를 유도하고 노후수도관도 점차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여 나갈 것이다.

셋째,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환경을 고려하고 오염을 예방'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시화호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환경성(環境性)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모든 주요 정부정책이 가져 올 환경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친환경성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처럼, 생산과정의 최종단계에서 공장 밖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을 디자인 할 때 사용단계에서의 오염 유발과 사용종료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기술과 공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넷째,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환경행정 추진이다.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자율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공존하고, 사회의 유기적(有機的) 연계와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만 환경이 보전되기는 어렵다. 새천년에는 주민,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의 개별 행위주체 모두가 환경보전의 방관자가 아니

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환경보전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한다. 정부도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확산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는 민간환경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참여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정책의 사전예고제 등 의견수렴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다섯째, 환경기술과 산업육성 그리고 지식기반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산업은 부가가치당 에너지 원단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다. 특히, 오염집약도(총생산비용에서 오염방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와 오염배출 원단위가 높아 환경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므로 이의 극복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기술 및 산업 육성, 지식집약적 산업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정기술, 재생에너지 개발 등 청정산업 육성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이다.

우리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지구촌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180여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환경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뉴라운드 출범 등 환경을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환경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제환경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산업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환경

규제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제환경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울 것이다.

이상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새 천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짧은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환경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자.

따지고 보면 환경위기는 각종 오염과 훼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경제구조와 사회체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외부의 사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시대정신(時代精神)'이라는 인식의 창을 통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에 자연은 인간밖에 존재하는 외적 환경이자, 정복과 개발의 대상일 뿐이었다. 더 많이 생산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미덕이 되고, 성장이 최고의 가치로 이해되어 왔다. 아울러 유한한 자연자원의 무한한 착취가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사회 경제 제도적 접근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환경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반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환경윤리를 정립하는 가치 이념적인 대전환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물질적 풍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너무 탐닉하여 인간이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환경제난은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반성과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있다. 늦기 전에 인류 생존의 문제로 환경위기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 기계주의적 자연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생명 중심주의적 세계관, 유기체적 자연관, 정신주의적 가치관으로 '패

러다임 수준'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의 이웃과 미래세대, 또한 이 땅에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만이 환경위기를 구할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밀레니엄, 새 해부터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